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formance Analysis of the 1st Comprehensive Promotion Plan for Public Design

주 저 자 : 최성호(Choi, Sung Ho)

한양사이버대학교 건축공간디자인학과 교수

<https://doi.org/10.46248/kids.2022.4.310>

접수일자 2022. 12. 5. / 심사완료일자 2022. 12. 8. / 게재확정일자 2022. 12. 26.

Abstract

The 1st public design comprehensive promotion plan from 2018 to 2022 by the Public Design Act was established and it has been operated until now. And now 2nd comprehensive promotion plan is being prepared. In order to establish the direction for the new 2nd comprehensive promotion plan,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1st comprehensive promotion plan. This study analyzed 1,639 project names and contents in the Nara Marketplace(national procurement system) and analyzed them by administrative agency type to measur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so far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Through this, it was understood that the 1st comprehensive promotion plan was effective in defining the function and role of public design, and it was found that key topics such as safety and convenience should be continuously linked. In addition, preparing for the aging and securing local identity were found to be very important in the 2nd promotion plan.

Keyword

Public design(공공디자인), Comprehensive promotion plan(진흥 종합계획), Performance(성과)

요약

공공디자인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디자인이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공공디자인법은 제5조에서 진흥 종합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계획년도로 하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 운용되었고 이제 제2차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이 준비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2차 진흥 종합계획이 나아갈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차 진흥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1차 진흥 종합계획의 중점전략이었던 5가지의 전략은 세부 사업으로 실행되어 왔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나라장터에 공고된 사업 1,639건의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키워드 카테고리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행정기관 유형별로도 분석하여 정량적, 정성적 측면에서 그간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제1차 진흥 종합계획이 공공디자인의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는데 유효하였음을 이해하였고, 안전과 편의와 같은 중점 주제는 지속 연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와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와 지역 문화의 정체성 확보 등에 대한 필요성도 분석되어 제 2차 진흥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추진내용

- 2-1. 제1차 진흥 종합계획 수립 개요
- 2-2. 제1차 진흥 종합계획 추진 현황

3. 추진전략별 성과분석

- 3-1.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3-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 3-3.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 3-4.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3-5.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 3-6. 성과와 한계 소결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6년 8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으로 약칭)’이 시행되었고, 국가 단위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2018년 5월 국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 배포되었다. 공공디자인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디자인이다.¹⁾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구현 목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간의 종합적인 진흥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공공디자인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이를 기초로 정책적 접근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여러 가지 진흥 정책과 사업들이 실행되어 왔다.

현재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방향성이 논의되는 시점에 있다. 따라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행 내용과 문제 요인들을 분석해 보는 것은 향후 5년간 공공디자인 진흥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바탕이 될 것이다.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2017년~18년 수립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사회적 이슈로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디자인 등에 집중하며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을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더하는 공공디자인’과 같은 추진전략을 내세우며 생활과 가까이 구현해야 할 공공디자인의 가치와 방향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수립될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추진전략들의 성과수행 측면을 조사, 검토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수립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성과들을 정량적, 정성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법 제5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국가가 수립하는 가장 상위계획에 해당하

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향후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연구자들과 행정가들에게는 공공디자인의 성과와 한계점을 이해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계획의 대상으로 하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사업 영역별 수행결과 정량값을 추출하고, 사업들의 특징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차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의 반영과 현재까지의 변화 추이를 이해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나라장터에 등록된 공공디자인 사업 유형별 관련 디자인 사업의 제목과 과업지시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계량화하고 과업내용을 분석하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차 진흥 종합계획의 세부 전략 중 하나인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주요 사업으로 다루어진 범죄예방 관련 디자인사업은 나라장터 전수조사 결과 총 147건, 생활안전 관련 디자인사업은 총 377건이었다. 또 세부전략 중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관련 사업은 총 269건, 생활편의 관련 사업은 221건, 생활품격 관련 사업은 총 679건으로 본 연구를 위한 전체 나라장터 대상 과업지시서의 분석 대상 총 수량은 1,639건이다.

본 연구는 1,639건의 대상을 시계열적으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으로 구분하고, 지자체별 사업이행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기초 시, 기초 구, 기초 군, 공공기관, 중앙부처의 총 6개 행정주체별로 구분하여 사업을 분류하였다.

아울러 각 사업의 제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들을 정성적으로 파악하여, 각 세부전략별 관심 사업의 유형과 성과 등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98% 이상이 나라장터에 탑재되는 특성을 활용하였으나, 1차 진흥 종합계획의 전략에 기초한 주제어 검색기법으로만 사업을 추출하여, 1차 계획의 세부 전략에 나타나지 않는 세부적이고 매우 특화된 별도의 디자인 사업들이 계량화되지 못하고 누락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진흥 종합계획이 추구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그 세부전략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큰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고, 나라장터의 데이터를 분석하

1) 최성호, 한국 공공디자인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연구 Voi.01 No.1, 2021, p.47

여 사업 유형을 정리함에 따라, 진흥의 한계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는 적절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추진내용

2-1. 제1차 진흥 종합계획 수립 개요

공공디자인법 제5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디자인법은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5조 제3항에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다음 [표 1]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 1] 공공디자인법의 진흥 종합계획 요구 사항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따라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위해서는 다음 [표 2]와 같은 세부 수립요건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정책구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와 정부 정책 및 기타 해외 실행사례 등을 통한 시사점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전략 체계를 구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공공디자인 관련 메가트렌드와 공공디자인법의 규정 내용, 당시 정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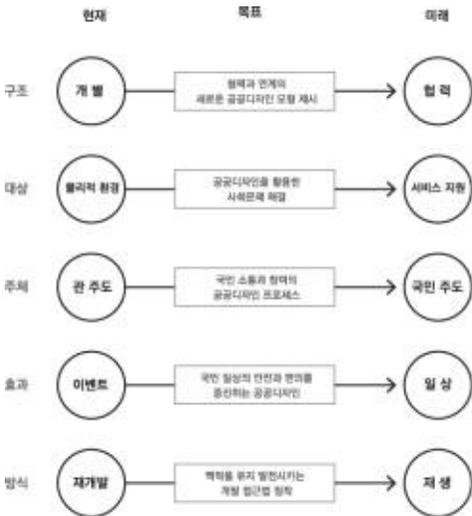
지향기치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로 법제정 이전 지자체별로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을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협력하고 연계하는 사업으로,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협의하는 과정으로의 정착을 세부전략 곳곳에 녹여 넣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둘째, 물리적 환경개선 뿐 아니라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서비스 지원체제까지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셋째, 주민소통 및 참여를 통한 국민 주도의 공공디자인을 실현하고 절차를 체계화하는데 방향성을 두었다. 넷째, 일회성 보여주기식 사업과 정책을 지양하고 일상에서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국민 체감형 접근과 해결방안 제시에 목표를 두었다. 다섯째,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의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접근을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

[표 2] 진흥 종합계획 세부 수립요건

공공디자인의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공공디자인 관련 법령 및 정책 조사, 문제점 파악 -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및 지침, 정책 및 실행 사례 등 조사, 문제점 파악 - 공공디자인 관련 주요 선진국의 정책, 실행사례 조사 및 시사점 제안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종합적·체계적인 관리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이 담아야할 기본목표와 방향 구상 - 공공디자인의 실천전략, 정책과제, 세부실천 과제 제안 - 연차별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 포함 - 공공디자인 계획의 적용과 실행을 위한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상 - 공공디자인 전담기관 관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정의, 체계, 관리에 관한 개념 수립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인력 육성 방안 - 공공디자인 용역 수행을 위한 기관 및 민간인력 육성 방안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제도 등과 관련 방향 제안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협력방식 연구 - 공공디자인 사업협의체 구성 등 국민의 참여사항 제안
의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 수립 - 관련 발표 및 의견수렴 (학회, 지자체, 업체 관계자 등 참석)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이러한 수립방향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공공디자인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생활안전의 영역에서 치안 안전, 교통 안전, 재난 안전의 크게 3가지 중점영역과 관련된 과제들을 검토하고 이를 세부전략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영역에서는 가로환경과 행정서비스, 문화재 및 관광지 대상의 접근, 교통시설과 문화 및 체육시설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과제를 세부전략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생활편의의 영역에서는 교통 편의, 관광 편의, 주거 편의의 관점에서 세부전략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품격제고에서는 초기 국가 품격 단위가 언급되었으나 기본적으로 마을 품격과 도시의 품격을 우선시하는 세부전략 과제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표 3]과 같은 5대 전략, 19개 과제가 도출되었다.



[그림 1]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방향

2-2. 제1차 진흥 종합계획 추진현황

공공디자인 사업은 '2016~2017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및 '2019~2020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그리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산업디자인 실태조사

2)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2018.5, p.10

사(2020년 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2020년 기준 약 2,500억원~2,700억원 내외의 사업규모로 추정되어 2016년 법 제정 이후 소폭 증가에서 2019년을 기점으로 소폭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제1차 진흥 종합계획 목표와 추진전략 개요

비전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
목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교통안전디자인 재난대비 안전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길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시설 만들기 이용하기 좋은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밤에도 품격있는 문화관광 환경조명 디자인 공공시각이미지 품격제고 및 품질 관리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 확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 공공디자인 관리 및 검수 체계 구축

이를 전체 디자인산업 규모에 대입하여 보면, 민간 부문을 포함한 디자인산업 규모 19.4조원 대비 공공디자인은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규모와 사업은 다소 감소하여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인력 측면에서는 2020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결과,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가 37.5%로 나타나 디자인 전담부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이이지만 증가 폭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부처의 경우 대부분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자체 예산 3천억원 미만 지자체의 경우 전담부서가 없고 예산 5천억원 이상 지자체의 경우 전담부서가 있는 비율이 높아 지자체 예산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은 관계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부서 인력은 2019년 575명, 2020년 563명,

중앙부처의 디자인부서 인력은 2019년 46명, 2020년 25명으로 전반적으로 확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인력 감소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현재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의 전문인력 구축이 의무사항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확장과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의 실질적 사업규모는 제자리 상태를 담보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대와 사업 투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 공공디자인 주요 진흥성과를 살펴보면, 2021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에서 기초 군과 기초 구 단위 발주사업의 사업건수가 적은 편으로, 공공디자인은 광역 시도와 기초 시 중심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진흥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디자인의 영역별 유형 측면에서는 공공시설물과 공공공간, 진흥계획 수립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시각매체와 공공용품의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제2차 진흥 종합계획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공시각매체에 대한 진흥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IT 기술 등과 접목된 시각매체 확장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디자인을 추진, 관리하는 주체가 주로 도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 관광, 복지 관련 부서 등과의 협업체계가 필요함을 실증하고 있다.

3. 추진전략별 성과 분석

3-1.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3-1-1. 범죄예방 관련 디자인 사업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수립된 진흥전략의 첫 번째 전략은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으로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교통안전디자인, 재난대비 안전디자인의 세부전략 과제가 수행되었다. 이 중 범죄예방 관련 사업들은 적은 사업비로 안심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여러 지자체에서 우선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주요 사업 명칭 분석에 따른 정량적 사업의 수량 관점에서 범죄예방의 키워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사업의 추진주체 유형 면에서 중앙부처는 거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광역지자체의 비율도 약 10%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장소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주로 사업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범죄예방 관련 디자인 사업의 약 2/3가 고밀도 주거지역이 많은 기초 시 단위(33.3%)와 기초 구 단위(30.6%)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골목길과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들이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공모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확산이 촉진된 성격도 강하였다.

초기 범죄예방이라는 표현은 지역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여론의 형성과 함께 최근 서서히 '안심 환경' 등의 용어로 변경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표 4] 범죄예방 관련 디자인 사업 수 추이

주요사업명	'17	'18	'19	'20	'21	'22	계
범죄예방	16	18	17	20	21	15	109
CPTED	0	6	5	10	8	3	32
여성 안전	1	0	1	1	3	0	6
합계	17	24	23	31	32	18	147



[그림 2] 범죄예방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유형

범죄예방 관련 디자인 사업은 CCTV, 비상벨, 곡면 거울 설치, 고보조명 설치, 바닥 표지병 조명 등 범죄 예방시설물 설치와 환경 정비 또는 미화 측면 등에서 사업 결과가 유사해지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범죄예방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지역도 증가하는 등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사업의 추진 형식에 있어서는 디자인의 차별성은 다소 크지 않고, 소규모 단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복합적인 도시 공간에서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다른 공공디자인 사업과 동시에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범죄예방 관련 디자인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경향은 범죄예방 관련 사업을 추진할 장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직접적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범죄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저감하는 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3] 범죄예방 관련 공공디자인사업 특징

3-1-2. 안전/안심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생활 안전 관련 디자인사업 중 통학로, 스쿨존 등 어린이 보행 안전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전체 사업 중 70%에 이를 정도로 주요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교통 관련 어린이사고 등 사회적 이슈와 함께 사업의 확대를 가져왔다.

교통과 어린이 관련 사업은 기초 시 및 기초 구 단 위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반으로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심거리 조성사업은 '걷기 편한', '조명' 등 거리 환경을 개선하거나 조성하는 사업을 포괄하는 사례가 많았고, 안전/안심 사업들 모두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초 시군구 지자체에서 91%이상 실행되고 광역 지자체에서는 거의 실행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최근 들어 재난/재해대비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들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어, 향후 제2차 진흥 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와 변화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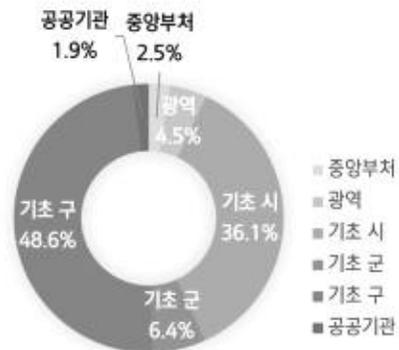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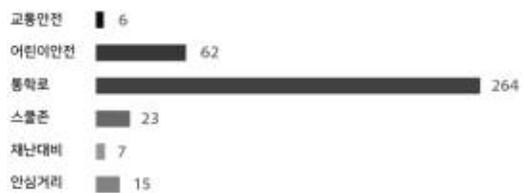
'안전은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에 기본 원칙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추세로 발전해왔고, 안전디자인 사업은 단독 사업보다는 복합과 통합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통안전디자인과 관련해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적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실버존 대상 교통안전디자인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스마트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교통안전이나 재해예방 등의 새로운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안전/안심 관련 디자인 사업 수 추이

주요사업명	'17	'18	'19	'20	'21	'22	계
교통 안전/주차장	1	2	0	0	3	0	6
어린이 안전	5	7	4	11	15	9	62
통학로	0	45	59	48	62	49	264
스쿨존	0	2	12	3	3	3	23
재난/재해대비	1	0	1	0	3	2	7
안심거리	1	1	2	4	5	2	15
합계	9	57	78	66	90	63	377

1차 진흥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한 기반은 비교적 마련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점진적 확산으로 진흥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고령자 층에 대한 교통안전 부분은 사업추진이 미진하므로, 고령자 인지 등을 고려한 안전체계의 접근 등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4] 안전/안심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유형

또한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 산업 안전 등에 대해서는 1차 진흥계획에서의 관심과 달리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연구와 접근이 2차 진흥계획에서 발전적으로 승계 발전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범죄예방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특징

3-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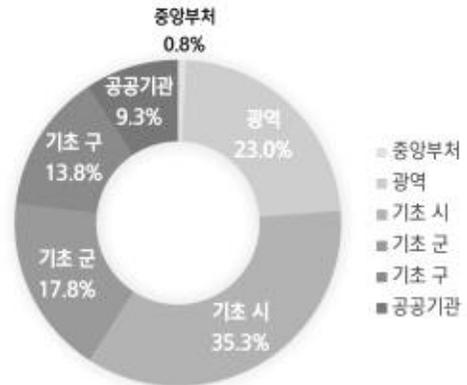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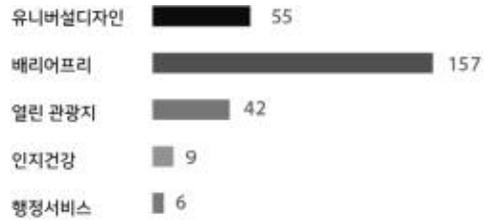
1차 진흥 종합계획에서 세부전략 중 강조되어 온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이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사업의 대부분이 둘레길과 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장애’ 관련 디자인사업에 국한(58.4%)된 경우가 많아, 높은 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으로 발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시 단위에서 오히려 활발하고, 기초 군(17%)과 기초 구(13%) 단위에서는 사업 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령자의 인지건강디자인 사업과 행정서비스 사업은 서울시 비중이 높아, 선도 사업 정도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용어에 대한 이해수준 등에서 향후 확산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교육의 강화 등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구체적 사업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전체의 20.4%에 불과하여 무장애를 넘어선 보다 높은 디자인 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

[표 6]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수 추이

주요사업명	'17	'18	'19	'20	'21	'22	계
유니버설디자인	4	4	12	16	11	8	55
무장애	21	19	20	33	35	30	157
열린 관광지	2	9	3	6	11	11	42
인지건강	1	1	1	2	1	3	9
행정서비스	1	1	1	1	1	1	6
합계	28	34	37	58	58	53	269



[그림 6]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행약자 배려를 강화해야 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무장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들이 무장애 디자인 기반의 단순한 이동성, 접근성 개선에 국한된 한계가 드러나 있어 이동 편의성 향상을 넘어선 정보와 콘텐츠 영역의 인지성과 관련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증가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

행정서비스 개선 사업들은 기초 지자체보다는 광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므로 부처 협력이나 광역에서 주도하는 사업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선도 성격으로 수행되었던 인지건강디자인 사업들도 그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확산을 위해 도시단위를 벗어나 고령화가 빠른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특징

3-3.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제1차 진흥 종합계획에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의 주요전략 중 하나로 언급된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세부전략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과 안전,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안내체계 구축 등과 통합 추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규모 및 예산 투여 측면에서 비교적 범죄예방 등의 사업에 비해 규모가 커서 도시화 지역의 추진 비중이 높았다.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유형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걷고 싶은 거리사업’으로 나타났다.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은 시, 구 단위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농산어촌 지역의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다. 특히 사업규모와 예산 투여가 비교적 큰 사업들은 도시화 지역의 추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길찾기(way finding)와 관련된 안내체계 구축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경향성을 보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주 업무인 체육시설이나 관광지 시설 대상을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 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않았다. 이는 실제 수행부서나 협력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공공디자인 사업의 대다수 수행이 도시계획 및 관리부서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문화 및 체육, 관광 부서의 추진이나 협력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7]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디자인 사업 수 추이

주요사업명	'17	'18	'19	'20	'21	'22	계
걷고 싶은 거리	0	20	26	19	39	32	136
길찾기	0	4	1	1	4	0	10
안내체계/안내사인	14	10	11	7	15	8	65
교통거점/버스환승센터	2	1	2	1	3	0	10
합계	16	35	40	28	61	40	221

‘생활편의’와 관련된 공공디자인 사업은 ‘생활체감’이라는 주제와 함께 공공디자인에서 지속적으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 속에서의 체감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생활편의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들

은 도시 지역에 집중된 상황에서 벗어나 농산어촌 지역의 실질적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형태로 발전적 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8]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앞으로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은 지역정체성과 문화자산을 활용하는 등 문화적 특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공간은 공원, 광장, 보행로, 수변공간, 지하공간 등 구체적 대상으로 사업의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 관광, 체육시설은 도시 기능 변화 및 시설과 공간 노후화와 연계한 리모델링 사업 등에서 공공디자인을 반영한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안내체계 측면에서는 단순한 사인 정보 개선이상의 시설물 통합과 적정 위치에 대한 설정기준 수립 등 체계 측면에서의 종합적 접근과 공공공간 대상의 편의시설 중 핵심적 사업으로 발굴할 필요도 있다.



[그림 9] 생활편의의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특징

3-4.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 공공디자인 사업은 품격이라는 용어의 지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합적 풍경을 다루는 '경관'과 매우 밀접하게 작동하고 있다. 실제 대다수의 기초지자체가 '공공디자인'과 '경관'을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관리 측면에서 가장 흔하게 다루어지는 생활품격 관련 공공디자인은 야간경관 또는 야간조명과 관련된 사업이다. 생활품격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의 약 64% 사업이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생활품격 공공디자인 사업은 주로 원도심의 골목길과 상점가 등 문화경관의 개선에 집중되어 있고, 구체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네맛춤, 골목길 등의 관련 사업과 디자인거리 등의 사업이 13.4%, 디자인거리가 11.5%로 거리에서의 공공디자인 품질 개선이 약 1/4인 24.9%에 이른다. 하지만 사업의 품질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도시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지방도시의 사업에서는 디자인 전문가가 부족하여 엔지니어링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등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품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 특새공간이나 유희 공개공지 등과 같이 지역의 공간 구조 특성을 활용하여 사업지를 발굴하는 공공디자인 사업들은 미진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사업전개 과정에서 주민협이나 소유주와의 협의 절차 등에 따른 소요시간을 반영하기 어려운 디자인사업들의 단기 사업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다수의 디자인 사업들이 1년 내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나 참여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물리적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프로세스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변화와 예산 배정을 다루는 의회 차원의 이해를 위한 공공디자인 특성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나 브랜드 관련 시각이미지 등 지역정체성 구축 사업도 대체로 이행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행정체계 전반에서 브랜드를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도시 이미지 전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품이나 기호를 개발하는 단순한 디자인 영역으로 이해하는 측면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품격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들은 1차 진흥 종합계획의 다른 유형과 달리, 비교적 기초 시, 기초 군, 기초 구의 상대적 비율 폭이 그리 크지 않은 점에서 차별화된다. 즉, 조형성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의 시각

적 아름다움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행정규모와 관계 없이 그 필요성이 고르게 인지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파악되기 때문이다.

[표 8]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관련 디자인 사업 수 추이

주요사업명	'17	'18	'19	'20	'21	'22	계
동네맛춤, 골목길	2	11	8	21	28	21	91
상점가 디자인	3	0	4	0	0	0	7
도시 품격 / 시각이미지	1	2	3	2	3	2	13
특새공간/ 공개공지	3	3	1	2	2	1	12
야간경관	71	68	80	86	87	43	435
디자인거리	0	0	13	14	25	16	78
도시브랜드	0	4	12	14	4	7	43
합계	80	108	121	139	149	90	679

생활품격 공공디자인 사업은 1차 진흥 종합계획의 세부 전략에 따라 도시 품격을 만드는 관점에서 대다수 사업이 거리에만 집중되어 앞으로는 광장이나 수변공간, 공원 등 공공공간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장 많은 사업 수를 보인 야간경관 사업은 사업의 수는 많으나 각 지자체 등에서 품질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시미관 개선, 관광지 활성화 등의 명분으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되는 사업들이 많아 고품질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적극 활용과 심의 등을 통한 품질관리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품격은 심미성과 감성 등 디자인의 고유한 기능 중 하나인 조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른 부처나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기반의 사업들과 차별화가 확실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의 단순 환경개선이나 정비 사업들도 도시미관을 향상시킨다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체계 내에서 사업의 차별화가 쉽게 보이지 않는 점도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점이다.

특히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1차 진흥 종합계획의 실현 과정에서 공공시각매체 개선에 매우 취약한 상황

을 보이고 있어 품격의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적인 정보와 그래픽 개선에 대한 강화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각매체 관련 영역은 특히 국내 공공디자인 발전에서 소외된 영역으로 글로벌 표준을 상정하여 발전하고자 하는 도시에서 이 영역에서의 발전과 활용은 필수적이다.



[그림 10]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생활 품격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미지와 정체성을 구축하는 영역으로의 사업제시가 필요하며, 초기 기획단계에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심미성을 검토하는 심의체계의 개선 등 행정체계 및 위원회 운영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11] 생활품격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특징

3-5.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제1차 진흥 종합계획에서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 사업이 아닌 행정체계와 법·제도, 교육 등과 관련하여 진흥을 위한 보완 기능 측면에서의 접근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 유형을 크게 분류해 보면 지역위원회, 관련 법·제도, 전담기관과 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의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성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9]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의 성과

항목	성과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률 92.6% 지자체 소속 위원장 비율 63.2% 지역위원회 위원수 평균 22명
관련 법·제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3건 (2018.1.18.시행) 1)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2)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전담기관/교육/정보시스템	전담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정 홍익대, 서경대 등 공공디자인 대학원 과정 개설 공공디자인전문회사 300여개로 증가 공공디자인 정보포털 구축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세부전략에 따라 각 지역별 '지역위원회'의 구축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진흥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위원회 운영률은 92.6%에 이르러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심의 등을 통해 지역의 공공디자인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의 민간전문가가 아닌 지자체 소속의 행정 공무원이 소속 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율이 63.2%에 이르고 있어,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실제 지자체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에 대한 정성적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를 위한 전문 인력 수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전문가 참여 및 잦은 위원회 인력 구성 변동으로 심의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초 심의 위원과 재심

위원간의 의견 불일치, 일관성 결여 등 심의의 신뢰도 하락과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등과 통합운영을 위한 매뉴얼 부재 등으로 인한 혼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심의에 대한 후속조치 반영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이를 운용할 행정인력이 부족하여 심의보고 후 미 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고려할 때 지역위원회 운영 모델에 대한 개발, 심의절차에 대해 법의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의 위원회 운영 고시 제정 추진, 원격심의 운영 모형에 대한 지원방안 개발 등의 행정적, 제도적 접근방안들이 2차 진흥 종합계획에서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차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추진되어 마련된 법제도 측면 중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호, 2018.1.18.제정)’은 공공디자인 대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교육 및 세부 매뉴얼 제공 등의 부재로 학술용역이나 엔지니어링 대가 등이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4호, 2018.1.18.제정)’는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창작료 적용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안서 보상제가 시행되기 어려운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제도적 여건도 있지만, 보상 금액으로 제시된 300만원 또는 사업 예산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보상하도록 한 액수 산정이 공간단위의 큰 사업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역시 세부적인 측면에서 국내의 타 법령에 비해 전문인력의 기준이 너무 낮게 잡혀있어, 대다수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변용한 다른 인력 산정 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가 필요하다.

제1차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담기관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지정되었고, 지속적인 예산편성과 인력을 통해 전체 공공디자인 사무를 관리하게 된 점은 초기 단계이지만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력규모가 작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점, 또 산업디자인진흥법과 달리 전담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발전적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공공디자인 교육이 행정기관에서만 이루어져 오다 1차 진흥 종합계획의 시기에 홍익대학교와 서경대학교 대학원 등에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것은 긍정적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학부에서는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공공디자인 전문 교육에 대한 방안을 여러모로 논의해야 할 필요도 증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발주조건에서 공공디자인법에 의한 공공디자인사업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와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는 재고하여 공공디자인전문회사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틀로 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공공디자인 영역은 민간의 디자인을 수행하는 산업디자인보다 훨씬 복합적인 공공성의 문제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의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산업디자인 프로세스와 구분되는 점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수가 이미 300개 이상으로 확대될 정도로 진흥된 만큼 이제는 법적 제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3-6. 성과와 한계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에서는 범죄예방과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이 전체 사업의 70%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정 부분 표준화 양상을 띠면서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사업 내용 측면에서는 소규모 단위 사업 중심으로만 사업이 이루어져 확산성에서 다소 취약하였고, 향후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자 안전 및 재난안전 등의 영역에 보다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에서는 보행약자 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사업이 확산되었지만 무장애 개념과 물리적 접근성 개선에 국한된 한계가 보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보와 콘텐츠 및 인지 개선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보다 넓은 광의의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령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과 표준 유니버설디자인 체계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은 다른 영역에

비해 사업의 건수는 적지만 규모와 예산 투여는 상대적으로 컸으며 도시화 지역에서의 추진 비중이 높았다. 특히 가로와 안내체계 중심의 지자체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나 반면 거리사업에만 한정되거나 단편적인 안내체계 개선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보였다. 따라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 및 체육, 관광 등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의개선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시설물 통합과 가로, 공원,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 전반의 접근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은 디자인거리 사업 등 디자인의 차별화를 지향하면서 조형성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었으나 대다수 사업은 경관과 연계한 야간경관 측면에서의 접근이었고 틈새공간의 발굴이나 도시브랜드의 관리 등에서는 상당히 취약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심미성과 감성 등 공공디자인 고유의 조형적 기능성 강화와 다양한 품질관리 체계 등 역할이 적극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섯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은 정량적 측면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운영율이나 지역위원회 위원수 확보,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 3건 제정 등 성과도 있었으나 위원회 운영을 위한 고시의 부제와 지역 위원회

심의 수준의 저하 문제를 위한 대응방안, 원격심이나 광역 심의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외에도 제안서 보상 기준의 문제, 전문인력 기준의 상향 조정 필요성 등도 주요한 문제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용역 중복 지원 문제 등도 문제요인을 언급되었다. 따라서 다음 진흥 종합계획 수립시에는 이러한 법 제도적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 로드맵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시점으로 하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5년간 성과에 대하여 국내 거의 대부분의 공공디자인 사업발주가 등록되는 '나라장터'의 공공디자인 사업목록을 진흥 종합계획의 각 사업전략별 프로젝트 수행 이력과 내용을 정량적 수치화하고, 지자체의 유형별로 비교하여 성과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행된 내용과 향후 발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제1차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그림 12]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종합

방향과 비전, 목표 및 중점 전략구조와 세부전략의 개요를 알아보고, 3장에서는 각 중점 전략별로 키워드 분석을 통한 주요 사업 내용의 분석 및 정성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사업 전개 양상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하였다.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법 제정 이전 미관 중심으로 다루어지던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기능을 일상 속 생활체감과 안전과 편의, 품격이라는 3가지 가치를 명확히 하는 점에서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적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강점은 다소 부각되지 않아, 향후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진흥 종합계획은 제1차 진흥 종합계획에서 지역적으로 도시 지역에 국한되었던 사업들을 농산어촌으로 확산하고, 수도권에서 지역 균형으로 발산하는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 안전이나 편의는 기

본사항으로 통합 발전시키면서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과 각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연계하여 그려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디자인이 디자인이 추구하는 심미성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디자인전문가 활동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2018.5.
2. 최성호, 한국 공공디자인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연구 Vol.01 No.1, 2021
3. 최성호, 공공디자인토론회-2022,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방향과 접근, 2022.10.20.
4. www.law.go.kr